



철통 경계 한미 FTA 6차협상 첫날인 15일 오후 협상장인 서울 신라호텔이 FTA 협상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막기 위한 경찰 병력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한미 FTA 6차협상 첫날... 가지화된 주고 받기 시나리오

“무역구제-車·의약품 빅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양측의 주고 받기식 '빅딜' 구상이 하나둘 가지화되고 있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6차 협상 첫날인 1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측이 무역구제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과회의 개최를 거부한 데 대해 “미국은 이제 가지 분야에서 진전을 이를 준비가 돼있다”며 “그러나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우리측이 반덤핑 절차 개선 등의 요구를 관철하려면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계의 개선과 약가 적정화 방안

의 보완책 및 신약특허 개선 등 미국 측의 요구를 먼저 수용하라는 의미다.

약가 적정화 방안의 보완책으로는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 결정 때 다국적 제약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사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서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간의 '빅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중훈 수석대표는 최근 “미측이 (한국의 자동차 분야) 세계 관련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차 관세) 양허를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우리측 자동차 세계 문제는 미측의 (자동차) 양허안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분야의 빅딜 외에도 우리측 농

산물 시장 개방과 미측 섬유 시장 개방도 표면적으로는 노출도가 크지 않지만 역시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돼왔다.

이들 농업이 우리측의 최대 민감 산업이라면 섬유는 미측의 최대 민감 산업이다. 양국이 FTA를 통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이루고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들 분야간 주고받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논리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된 시나리오다.

또 서로 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대응해온 쟁점 사항들간의 빅딜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인정과 썬트조각으로 대변되는 쇠고기 검역 문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 쇠고기 시장 침착 왜? 생산·도매價 한국의 20%...수출경쟁력 막강

미국 행정부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들은 최근 우리나라 한미FTA 특위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쇠고기 등 농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 협상의 진전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이 FTA 전체와 쇠고기를 연계시켜 강하게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15일 농림부와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미국농무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미국 네브래스카주 평

균 초이스급(최상급) 쇠고기의 생산자 판매 가격은 100kg당 174달러, 도매가격은 322달러로 조사됐다.

이 정도 가격 차이라면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 쇠고기에 물리는 40%의 관세가 유지된다 해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셈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이같은 감점을 앞세워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한국 수입 쇠고기 시장을 지배한 바 있다. 미국 입장에서

도 한국은 2000년대 들어 2003년까지 출근 일본, 멕시코에 이어 부동의 3대 쇠고기 수출 시장으로, 그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이후 우리나라 수입 시장에서 미국의 빈 자리는 고스란히 호주의 차지가 됐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수출 재개를 통해 호주에 빼앗긴 3대 쇠고기 수출 시장을 되찾는데 혈안일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한국군 3~4월경 레바논 파병

유엔, 평화유지군 공식 수락... 남서부 티르 인근 유력

유엔이 최근 한국군의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병 계획을 공식 수락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한국군 파병 규모는 350명 정도로 결정됐으며 파병 지역은 레바논 남서부 지중해 연안 도시인 티르(Tyre) 인근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유엔 사무국으로부터 한국의 레바논 파병을 접수하겠다는 공식 수락 서한을 받았다”면서 “파병지역은 조만간 합동참모본부와 외교부, 국정원 등 정부 시찰단이 현지를 답사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병 시기와 관련, 그는 “금년 상반기를 고려 중이며 3~4월경 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파병 지역을 어디로 할지는 협의중이지만 대략 남부 레바논 서쪽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소식통은 치안상황이 양호한 레바논 남서부 티르 지역이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레바논 정부와의 정례 정책협약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파병 후보지의 치안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합동참모본부와 외교부, 국정원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식 정부 현지협조단(시찰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씨앗전쟁’에서 이기려면



송기동 사회2부 차장

새해 벽두부터 국화와 장미 재배 농가들이 가슴 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외국계 육종업체들이 로열티 계약이 안 된 농가는 도매시장에 상장할 수 없게 하는 등 국화와 장미에 대한 로열티 부과를 강화하고 나선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화는 1주당 15~20원, 장미는 1천500원의 로열티를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 재값을 주고 로열티 계약을 하지 않으면 외국 품종 화훼의 증식·재배는 물론 유통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난방비 인상, 꽃 가격 하락, 저환율로 인한 수출포기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화훼 농가들의 시름이 더 깊어졌다.

이같은 ‘로열티 파동’은 우리나라가 2002년 국제 식물신제품보호연맹(UPOV)에 가입해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식량작물과 화훼, 과수류작물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의무화함에 따라 예견된 일이었다.

문제는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 개발이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의 장미 신제품을 만들려면 550여 개의 유전자 데이터를 검색하고 조합하는데만 2년이 소요될 뿐더러 상품화하려면 7~20년까지 소요된다.

설사 농가에서 선호하는 신제품을 개발했다 해도 보급하는데 만도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다.

유망한 식물자원을 선점하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은 ‘씨앗전쟁’ 또는 ‘소리없는 전쟁’이라 일컬어진다. 육종 선진국들은 전 세계에서 유망한 식물자원을 몰래 빼내 자국 것으로 만듦이 일쑤다. 지난 1947년 미국 식물 재배자 미터교수는 북한산에서 자생하는 한국 특산식물 정향나무(수수꽃다리)의 씨앗을 가져가 ‘미스 킵 라일락’이라는 실내 관상용 꽃으로 탄생시켰다. 이 꽃은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역수입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신제품 개발에 관한 한 우리는 아직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농도 전남을 선도하고 있는 전남농업기술원의 육종관련 인력은 8명에 불과하다. 예산 역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물론 이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장미와 녹차, 참다래, 마늘 등 9작목 32종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게가를 올렸다.

그러나 이대로는 육종 후진국 수준을 탈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육종 개발에 소홀히 한 탓으로 지적해야 하는 로열티 규모가 만만치 않다. 장미의 경우 지난 2004년 40억원 이던 것이 2005년 70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20억원을 지불해야 했다.

21세기 농업의 성패는 ‘씨앗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벼와 같은 식량작물에 치중하기 보다 화훼와 과수같은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에 국가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때다.

/song@kwangju.co.kr

공무원연금 개혁 시늉만?

제도발전위 ‘국민연금에 맞추지 않기로’ 미리 정해

지난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개혁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찌감치 ‘국민연금 수준에 준하는 개혁안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대전제를 정한 뒤 이번 개혁시안을 도출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행정부 간부가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연금 수준에 준하는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기획예산처 출신 위원은 최종 논의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한 위원은 15일 “경제부처에서 파견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공무원연

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준해 개혁하지 못할 경우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다른 위원들이 ‘공직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부처측 위원들은 “국민연금 수준에 준하는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개혁을 하지 않겠다”면서 개혁시안을 최종결정하는 각종 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개진했다고 이 위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파견한 위원이 계수조정소위 등 개혁시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모임에 불참하자 결국 재정경제부 출신 위원이 대신해 참석했다고 이 위원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문가 토론회 시작

16일 전문가 1차 협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법적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가 16일 1차 협의를 시작으로 이날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열린다.

전문가협의에는 국회 문광위 소속 지방문 의원과 문광부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영진 부부장과 관련 전문가, 광주시 위결한 문화체육정책실장 등이 참여한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전문가협의는 분야별로 3차례 진행되며, 1차 협의는 16일 오후 광주 프라도 호텔에서 ‘아시아문화의 전망’을 주제로 펼쳐진다. 이어 1월 말까지 ‘문화산업’과 ‘도시 재구성’ 분야에 대한 논의가 열릴 예정이다.

문광부는 지난 해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후,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 부처 및 광주시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목재가공산업의 새아름 **저이리**

1. 목재가공 공장

2. 목재가공 공장

3. 목재가공 공장

4. 목재가공 공장

5. 목재가공 공장

저이리 사업분야

- 목재가공(수출, 수입) - 목재가공
- 목재가공(수출, 수입) - 목재가공
- 목재가공(수출, 수입) - 목재가공

광주·전남 목재가공사업진흥공단

TEL: 061-337-5535

FAX: 061-334-5535